DPG+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lus

2022-01 |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리즈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혁신 드라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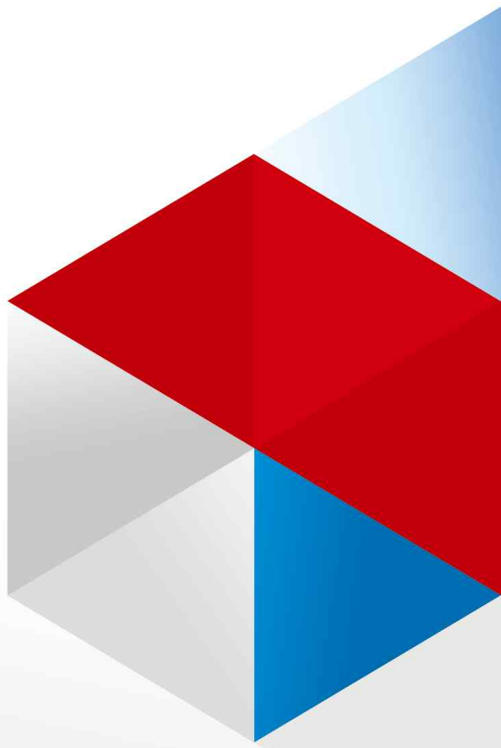
CONTENTS

Ⅰ. 국정과제로 본 디지털 혁신 정책방향 01

Ⅱ. 디지털 혁신 주요 성과 04

Ⅲ. ’23년 예산안으로 본 디지털 혁신 14

Ⅳ. 맺음말 17



Ⅰ. 국정과제로 본 디지털 혁신 정책방향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포함한 120대 국정과제 발표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22.5.2)

-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운영 원칙을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하는 6대 목표, 23개 약속으로 구성된 120대 국정과제* 발표

  * 윤석열 정부는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최초 발표하였으나('22.5.2), 이후 지역균형 발전 관련 내용이 추가된 6대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22.7.27.)

- 디지털 혁신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도 국정과제에 포함

▪ 다수 부처가 참여하여 국가 디지털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

- 디지털 혁신과 직접 관련된 국정과제는 총 41개로 전체 120개 국정과제의 ⅓ 이상을 차지하며, 이 외에도 상당수 과제가 디지털을 통한 지능화 및 서비스 혁신 내용을 포함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을 통한 국가·사회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국정과제 77번, 이하 번호만 표기)',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78번)' 등을 제시

  · 또한 디지털 혁신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정부 구현(11번)',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81번)' 등의 과제도 제시

  · 이 외에도 상당수 국정과제가 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지능화된 공공서비스로 확대·발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화·지능화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의 수는 훨씬 방대

- 디지털 혁신의 추진 주체는 과기정통부 및 행안부를 주축으로 하여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 다수 부처가 참여

  · 전통적으로 디지털 정책을 담당해 온 과기정통부와 디지털 기반 정부혁신을 담당해 온 행안부 등 양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추진

  · 그 외 디지털 중심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선도는 산업부 및 중기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은 교육부 등이 중심이 되어 수행 예정

■ 디지털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능력 있는 정부로의 혁신에 초점

▪ (산업 강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 및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 산업

및 제조업과 같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위에 있거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

- 또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25번)',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28번)'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35번)' 등 금융분야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도 강화

▪ (정부 혁신) 데이터를 폭넓게 연계·분석·활용하여 국민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거 기반의 과학국정을 실현

-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정부 모습을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의 연계·활용으로 작동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으로 제시

- 정부와 공공영역을 보다 지능화하여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증진하고 정책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

〈 윤석열정부의 디지털 관련 주요 국정과제 〉

국정목표	약속	번호	국정과제	주관 부처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중기부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7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부
		18	• 역동적 혁신성장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재부·금융위
		20	•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산업부
	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산업부
		24	•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산업부
		25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복지부
		27	•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방통위·과기정통부
		28	•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	국토부
	0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1	•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위
		35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금융위
	08. 하늘·땅·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 국토 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국토부
		40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해수부

국정목표	약속	번호	국정과제	주관 부처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7	•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복지부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52	•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	고용부
		54	•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고용부
		55	•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8	•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문체부
		59	• 국민과 동향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방통위
		62	•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문화재청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4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65	•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소방청
		67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복지부
		69	•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국토부·경찰청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1	•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농식품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기정통부
		75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과기정통부
		76	•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77	•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과기정통부
		78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기정통부
		79	•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과기정통부
		80	•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과기정통부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부
		82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교육부
		84	•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 해소	교육부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7	•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 자연 생태계 조성	환경부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101	•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정원·국방부·과기부·외교부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국방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17	•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중기부

* 출처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22.7월, 대한민국정부) 중 발췌

Ⅱ. 디지털 혁신 주요 성과

1. 「뉴욕 구상」 선언('22.9.21.)

■ 디지털 시대 세계적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강조한 「뉴욕 구상」 발표

- 대한민국이 이룬 디지털 성과와 미래 비전을 세계에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언급
  -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자유·인권·연대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
  - 한국 대통령이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을 주제로 정책 구상을 밝힌 첫 사례[1]로, 디지털 분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 이룬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할 것을 선언

그림1 | '디지털 비전포럼' - 「뉴욕 구상」('22.9.21.)



1) '"디지털 국제질서, 한국이 선도"…尹대통령의 '뉴욕구상' 공개', 머니투데이, '22.9.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209591483278

뉴욕 구상 :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모색하다 -

오늘 뉴욕대가 주최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제가 어제 UN 연설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국제사회가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디지털 중심지인 뉴욕시, 그리고 세계적 명문 대학인 뉴욕대학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지털은 그 자체가 기술인 동시에 혁명입니다. 인류는 디지털을 통해 정보의 양을 늘리고 이동의 속도를 높이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일상의 변화 그리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디지털의 본질은 속도입니다. 모든 것을 연결하고 무한히 확장시켜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디지털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 시민으로서 현실 세계와 디지털세계를 넘나들며 자유, 연대 그리고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은 자유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자유, 연대,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힘과 이익의 지배만 받게 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통제 권력이 되어 인류의 자유를 훼손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규범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디지털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한 후 공공 데이터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 다른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술적 영향이 기술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으로 파급됩니다. 이러한 디지털생태계는 특정 계층이 독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인류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디지털 격차를 크게 만들어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디지털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든 들어와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가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시대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노동과 일자리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디지털 위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로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촘촘히 챙기는 새로운 복지의 획기적인 출발이며, 디지털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심화된 디지털 시대의 모범 국가로서 그 성과를 세계 시민들, 개도국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략을 정밀하게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 결집해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대가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이 디지털 자유 시민의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고 지켜나가는데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2.9.28.)

■ 국가 디지털 정책로드맵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 디지털 심화와 글로벌 패권경쟁에 본격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종합전략
  - 「뉴욕 구상」 구체화를 위한 정책 이행안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 디지털 전략 청사진
  - 기술중심 세계 패권경쟁, 저성장·양극화, 코로나 등 대내외적 변화와 위기에 대한 해법이 디지털임을 분명히 하고, 디지털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도모할 것을 명시
-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고, 함께 잘 사는,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5대 전략·19대 추진과제 제시
  - 디지털 경제·사회 구현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동하기 위해 혁신의 동력, 범위, 방식을 재설계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고(혁신동력), 경제·사회·정부 전반을 디지털로 혁신하며(혁신범위),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를 조성·확산(혁신방식)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전략 및 추진과제 〉

전략	추진 과제
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1 기술패권에 대응한 '6대 디지털 혁신기술' 확보 2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3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4 100만 인재 양성으로 디지털 인재 富國 달성 5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6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디지털 실현
Ⅱ.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1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2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 3 농·축·수산업의 新 성장동력화
Ⅲ.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1 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2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 보장 3 디지털로 재탄생하는 지역사회 구현
Ⅳ. 함께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1 혁신 인프라 구현 및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2 AI·데이터 기술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Ⅴ.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1 민간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문화 정착 2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및 갈등 조정 3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4 디지털 혁신의 글로벌 확산

* 출처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2.9.28.)

■ 각 전략·추진과제 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 추진

▪ (전략1) 산·학·연 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보

- **(디지털 혁신기술 초격차 기술력 확보)** ▲①인공지능, ②반도체, ③5G·6G, ④양자, ⑤메타버스, ⑥사이버 보안 등에 연구개발 집중 투자, ▲임무지향·도전적 기술기획 확대 등
-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인공지능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기반 구축 ▲공공·민간 데이터 대통합,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SW 시장의 SaaS 중심 전면 개편 등

  * 인공지능, 데이터, 클라우드(인터넷기반자원공유), 소프트웨어
-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축)** ▲'24년까지 5G 이동통신 전국망 완성, ▲6G 원천기술 개발 및 후속 상용화, ▲양자 인터넷·센서·컴퓨터 기술추격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등
-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정보·컴퓨터 교육 수업시수 2배 수준 확대, SW 중심대학·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 확대 추진, ▲교육-채용 연계되는 민관협력형 교육 등
-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 ▲K-콘텐츠 제작·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지원펀드 확대, ▲해외 거점을 활용한 국내 OTT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K-디지털 글로벌 시장 주도)** ▲디지털 딥테크 중심 창업지원 강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전문 특화펀드 확대, ▲해외 인재의 창업·취업비자 취득 활성화, '(가칭)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전략2) 全분야 융합·혁신으로 디지털 경제 확장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가상 국립도서관 구축, 메타버스 기반 문화공간 구축, 비대면 문화해설 서비스 확산, ▲고품질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증 기반 스마트 물류 시설 지원 확대 등
- **(미래형 제조업으로 선진화)** ▲대·중견·중소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 제조데이터 공유·연계 및 활용 플랫폼 개발 추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복합단지 구축 추진 검토, 자율운항 기술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 **(농·축·수산업의 新성장동력화)** ▲지능형 농장 데이터 수집·활용·확대 등 정밀농업 도입·확산, 빅데이터 기반 방역시스템 고도화, ▲지능형 양식 협력지구 거점 구축, 주요 수산식품 全 공정 자동화로 생산성 향상 등

▪ (전략3) 전 국민을 포용하는 따뜻한 디지털 사회 실현

- **(안전·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 ▲생활·산업·재난 등 3대 분야에서 디지털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 ▲독거노인 스마트 돌봄, 산모·아동·중장년 지능형 건강관리, ▲친환경 데이터센터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효율화, 디지털 탄소중립 대표도시 선정·실증 등

-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 보장)**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 장전' 수립,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활용 지원, 취약계층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보급, SoC 10대 공간(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디지털 장벽 해소 사업 추진 등
- **(디지털로 재탄생하는 지역사회 구현)**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지정, 지역 디지털 혁신 100대 사업 추진 등

▪ (전략4) 민관이 함께 편리하고 똑똑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혁신 인프라 구현 및 데이터 전면 개방·활용 촉진)** ▲실손보험 간편청구 등 국민·기업이 단기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추진, ▲생애주기 등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 선제적 제공, 데이터·정부서비스 기능 표준화 및 API 형태로 개방 등
- **(AI·데이터 기술 기반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국정관리 체계 확립, 공공행정 절차의 지능·과학화, ▲국가적 위기대응·현안해결을 위한 데이터 협업 활성화 등
- **(안전·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보장)** ▲망분리·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 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마이데이터 정책 신뢰 확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안대비 지원 등

▪ (전략5) 민간의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을 북돋는 디지털 혁신문화 조성

- **(민간이 주도 디지털 혁신문화 정착)**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 추진, 기업·대학·정부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구축, ▲디지털 새싹기업 육성,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 추진 등
- **(규제 혁신 및 갈등 조정)**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 규제 발굴· 정비, ▲정보통신전략위 내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 설치 등
- **(디지털 경제·사회 기본법제 마련)** ▲'(가칭)디지털사회 기본법' 제정, ▲디지털 시대 제기될 수 있는 쟁점에 대한 디지털 질서(정책방향 및 기준) 확립 등
- **(글로벌 확산)** ▲세계와 디지털 혁신 비전·성과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 ▲'뉴욕 구상'·'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주요 국제협력 의제로 확대 및 국제 논의 주도 등

■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자연적·사회적 위험에 선제적 대응,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27년 글로벌 주요 지표를 디지털 경쟁력(IMD) 3위(現 12위),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OECD) 세계 최고국 지위 유지(現 1위), 혁신역량(WIPO), 1위(現 5위) 달성 목표
- 이 외 AI 경쟁력(Stanford AI Index) 세계 3위(現 6위),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現 23조), 디지털 6대 기술경쟁력(AI/반도체/5G·6G/양자/메타버스/보안) 최고기술국 대비 93% 달성 등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진일보 시키기 위한 목표 지표 설정

그림2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배경 및 비전·목표



* 출처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자료 ('22.9.28.)

3.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22.9.2.)

■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 - '디지털플랫폼정부'

▪ 지능정보사회에 요구되는 정부 모델로 다양한 데이터가 연결되고 플랫폼 기반으로 작동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제시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혁신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22.1.2.)

  · 정부가 집사처럼 복지혜택을 챙겨주는 '마이AI포털',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 등이 주요 내용

-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에서 이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주관부처로 과기정통부·행안부·개인정보위 3개 부처를 지정

▪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정부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변화 예고

-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는 '데이터'와 '플랫폼'으로,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통합적·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결정을 과학화하는 데 초점

- 이를 위해 공공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것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주요 언급 〉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수출하여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윤석열 정부 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자회견 ('22.1.2.)	'디지털 경제 비전' 발표 ('22.1.28.)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22.9.2.)
o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의 요구 파악과 국민들에게 정부가 먼저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 - 세금 낭비를 막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 -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치, 디지털 가이드 채용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o 단순한 행정 효율화 차원이 아닌, 거대 인공지능 두뇌를 갖춘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정부 o 임기 3년 차 내에 완성을 목표로, 향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사용하는 행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발전	o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o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하나의 국가 전략산업이며, 편리를 넘어 새로운 효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본격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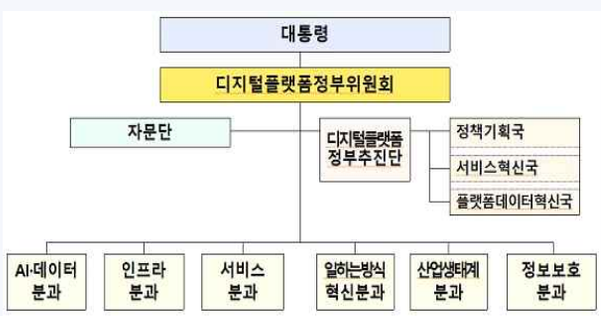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22.9.2.)
  - 위원회는 민간 및 당연직 정부위원 등 총 23명*이며,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로 구성
    * (민간위원 : 19명)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 전문가
      (당연직 정부위원 : 4명)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 장관 및 개보위원장
-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목표
  - 정부가 독점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국정운영 모델로의 변화 강조
  - 이를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로 ▲민관 협업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제시[2)]
- ’23.3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보고 예정[3)]
  - 더불어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핵심정책 관련한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실무급을 상시 참여시켜 중점 추진과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

그림3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위원회 조직도(안)

출범식(’22.9.2)



조직도(안)



* 출처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2.9.2.)

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2.9.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528&pWise=main&pWiseMain=A1
3) ‘디지털플랫폼정부위, 로드맵 수립 착수…내년 3월 국무회의 보고’, 조선비즈(’22.10.6.)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2/10/06/FD7Z4G5ET5ASJCSEUWDKJKUDR4/

4.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발표('22.8.22.)

■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범부처 인력 계획

▪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적 교육체제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를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8대 분야*에서 '26년까지 100만 명 양성을 목표

  * ①인공지능, ②일반 SW(블록체인 포함), ③빅데이터, ④메타버스(AR·VR 포함), ⑤클라우드, ⑥사물인터넷, ⑦5G·6G, ⑧사이버보안 등

▪ 이를 위한 2대 정책 추진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 제시

- 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첨단 디지털 산업에서 일상생활에까지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기에 양성

  ·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인재)**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시 정원 증원 허용, 학·석사 연계 패스트트랙 운영, 디지털 선도대학 육성 강화,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과정 운영 ▲4단계 두뇌한국 사업 추진, ▲영재학교·과학고의 SW·AI 분야 특화교육과정 운영 등

  · **(전공(도메인)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 ▲다양한 전공-디지털 기술 융합 부트캠프,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고경력 은퇴자를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 ▲기업·대학·지자체 등 연계 '캠퍼스 SW아카데미', 취업준비생 디지털 직업훈련 등

  ·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인재)** ▲대학의 자율적 디지털 혁신 지원, 산업 수요 기반 첨단분야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장년·장애인·군인 대상 맞춤형 AI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 ▲초·중등 정보수업 시수 확대, AI교육 선도학교 확대, 신기술분야 진로체험 기회 확대, ▲학교 교육과 연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 **(디지털 배지 및 재능사다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 부여,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친 우수 교육생 양성 및 디지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후속과정 지원 등

- 2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제공

  · **(교육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 ▲학교에 정보교육 담당교원 배치, 디지털 기업 직원의 학교·대학 등 정규과정 지도를 위한 규제 개선, ▲디지털 선도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교원 참여 등

  · **(AI·교육테크 활용한 교육혁명)** ▲빅데이터 AI 분석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하는 'AI 학습 튜터링 시스템' 개발, ▲AI 활용 행정업무 자동화, 양질의 에듀테크 개발·활용 지원 등

  · **(디지털혁신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 등

■ 디지털 인재 양성정책을 민관이 함께 협의·발굴·제안하는 정책협의체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 출범('22.10.20.)

- 257개 기업·협회·대학·유관기관과 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노동부가 참여, 인재육성·인재활용·인재양성정책 등을 논의하는 개방형 협의체로 운영

■ 과기정통부 및 국방부는 '26년까지 군 디지털 인력 5만 1천명 육성을 위해 850억원 투자계획을 보고('22.10.27.)

- 양 부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정과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군 AI 전문인력 1천 명, 디지털 산업 예비인력 5만 명 등 총 5만 1천 명의 디지털 인재 육성계획 발표
  - 양방향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습형 SW·AI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역량 장병에게는 기업 현직자의 멘토링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

그림4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추진 과제



* 출처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관계부처 합동('22.8.22)

Ⅲ. ’23년 예산안으로 본 디지털 혁신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수립된 첫 예산안으로, 639조원 규모

- ’22년 2차 추가경정(680조원) 대비 6.0% 감축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관련 예산 총 11조원 수준 편성

■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이 핵심과제로 포함

- ’23년 예산안은 ‘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②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③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의 3대 투자 중점방향을 중심으로 수립
- 이 중 디지털 혁신은 ‘②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의 핵심과제로 포함되었으며, 이 외에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징중 육성’, ‘R&D 고도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강군 육성 지원’ 등 다수의 핵심과제에 분포

〈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

투자 중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❶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❷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❸ 생활물가 안정 지원 ❹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❺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❻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❶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❷ R&D 고도화 ❸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 ❹ 산업·기업 역동성 제고 ❺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❶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❷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❸ 일류 보훈체계 구축 ❹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❺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 출처 : ‘202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2.8.30.)

■ 각 부처는 '23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분야에 디지털 혁신을 포함하고, 이를 위해 기술선점, 정부혁신, 산업전환 및 육성, 인재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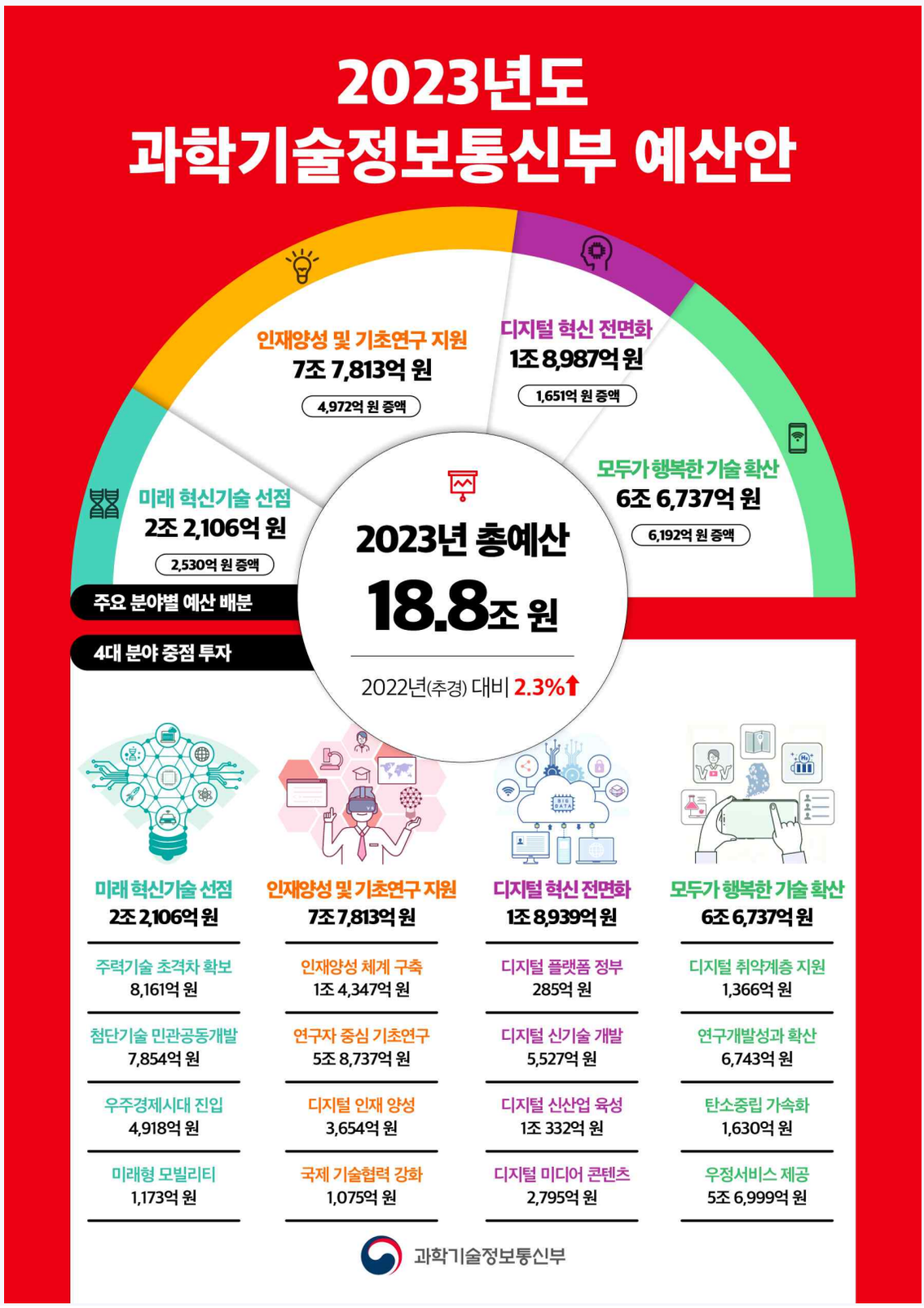
- (과기정통부) 미래 혁신기술 선점, 전략기술 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혁신 전면화,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 등
- (행안부) 디지털 정부혁신,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 (산업부) 첨단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 주력산업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 추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지역 산업단지 디지털화 등
-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등
- (교육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

〈 주요 부처의 '23년 예산안 및 중점 투자분야별 배분 현황 〉

부처	'23년 전체 예산안 ('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중점 투자분야 및 예산안 ('22년 본예산 대비 증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8.8조원** **(0.4조원 (2.3%) 증)** ※ 과기정통부 증감은 '22년 추경 대비 기준으로 발표 ※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30.7조원 별도	1 미래 혁신기술 선정 : 2조 2,106억원 (2,530억원 (2.9%) 증) 2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 7조 7,813억원 (4,972억원 (6.8%) 증) 3 디지털 혁신 전면화 : 1조 8,939억원 (1,651억원 (9.5%) 증) 4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 6조 6,737억원 (6,192억원 (10.2%) 증) ※ 과기정통부 증감은 '22년 추경 대비 기준으로 발표
행정안전부	**80.1조원*** **(9.4조원 (13.3%) 증)** * 이 중 사업예산은 4.4조원	1 디지털 정부혁신 : 9,353억원 (△3,068억원 (△24.7%)) 2 재난안전 : 1조 1,365억원 (△509억원 (△4.3%)) 3 지역경제 : 1조 6,496억원 (△4,560억 (△21.7%)) 4 과거사 등 기타 : 6,776억원 (△201억 (△2.9%))
산업통상자원부	**10.7조원** **(△0.4조원 (△3.7%))**	1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 5조 2,608억원 (△1,288억원 (△2.4%)) 2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 4조 2,640억원 (△2,625억원 (△5.8%)) 3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민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설정 : 9,136억원 (△287억원 (△3.1%))
중소기업벤처부	**13.6조원** **(△5.3조원 (△28.0%))** ※ 기후대응기금(1,448억원) 별도	1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 1조 9,450억원 2 중소기업 확대(스케일업)와 혁신성장 정책 추진 : 7조 4,410억원 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설정 : 4조 1,759억원
교육부	**101.8조원** **(12.2조원 (13.6%) 증)**	1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2 지방대학 시대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 추진 3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4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설정

* 출처 : 부처별 '23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그림5 |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 출처 : '과기정통부, 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2.8.31.)

Ⅳ. 맺음말

■ 윤석열 정부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임기 초부터 관련 정책을 강력히 드라이브 중

- 국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여러 핵심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로 설정
  -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과기정통부 첫 수장으로 반도체 전문가를 임명하는 등 취임 초부터 디지털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 국가 디지털 청사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이를 인적 측면에서 뒷받침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혁신의 비전과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
- 우리가 가진 디지털 경험과 역량을 세계와 공유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약속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위상도 강화
  -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디지털을 주제로 하여 세계에 우리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이 이룬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할 것을 선언

■ 경쟁력 있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다음의 고민이 필요

- 내실 있는 디지털 혁신 정책 수립의 동반자로 민간과 적극 협력
  -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역량과 다수의 경험, 현장에서 느끼는 실제적 어려움 등 디지털 전환 정책이 실제 차원에서 유효할 수 있도록 민간을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체적 모습 제시 및 체감 가능한 선도사례 조기창출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 전자정부나 디지털정부와 어떤 차별점이 있고, 디지털 전환의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구체적인 상(象)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정부·공공에 우수 모델을 제시하고 추진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 디지털 혁신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
  - 기술개발·인재육성과 같이 디지털 혁신의 추진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임기 내 완료라는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 장기적 지속투자 관점에서 계획 수립
- 디지털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 해소
  -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혁신에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온 정책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해결방안 모색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2022.7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 관계부처 합동(2022.9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전문 및 발표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 기획재정부(2022.8월). 2023년 예산안
- 과기정통부 보도자료(2022.8.31.). 과기정통부, 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30.). 내년도 행안부 예산 80조 편성 올해 대비 13.3%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8.29.).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원 편성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2.8.30.).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 교육부 보도자료(2022.8.29.).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 101.8조원 편성

| 작 성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정책기획팀
권 정 은 수석 (053-230-1206, jekwon@nia.or.kr)

| 기 획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이규엽 팀장

1.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 (ICT진흥 및 혁신기반조성(정보화, R&D)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라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